

박주선 “文정부에 협조할건 통 크게 협조”

국민의당 광주서 비대위 회의
“잘못된 건 지적해야 광주정신”
한국당·바른정당과 차별화 강조
AI농가·금호타이어 공장 방문



21일 광주시 서구 국민의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광주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비대위원들이 AI농가와 관련해 해당 기능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민의당 지도부가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이후 21일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권은희 시당위원장, 천정배·송기석·손금주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역 현안을 지도부가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이날 행보는 지난 5·9 대선 참패 이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뒷발 다지기'를 위한 호남 민심 추스리기를 위한 자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뒷발 호남에서부터 야당다운 야당,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 등을 강조하며 국민의당의 선명성과 정체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회견에서 “호남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신과 가치를 실현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지만, 준비부족과 역량미흡으로 기대를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국민의당이 거듭 태어나겠다. 호남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조할 것은 통 크게, 대범하게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원칙마저 파기하고 야당과는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독주와 강행을 이어가는 가하면 17명의 장관 가운데 15명이 코드·

보은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이는 적폐정치고, 이를 눈감아주는 것은 협력이라고 하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일자리 추경” 등을 예로 들며 “대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도 사전논의조차 없었다. 대통령의 행보는 파격적이고 탈권위적이지만 정책과 자세는 그렇지 않다”고 소통과 협치 부재를 지적한 뒤 “협치가 있어야 비로소 연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인사청문회 정국을 다루는 국민의당의 방식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지역 여론에 대해서는 “(민주당) 호남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원칙과 법

을 어기고 대통령이 공약을 위반해도 (야당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게 광주정신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인사청문회는 계획대로 하겠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다른 야당이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통령의 해명에 따라 냉각기를 어떻게 수습할지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인사청문회 지도부는 이날 오전에는 조류독감(AD)으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전남지역 양계농가 및 유통·판매상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어 오후에는 지역경제 최대 현안 사업장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방문해 사측과 노조측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정치권에서 해야 될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흡수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박 위원장은 “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막말도 범위와 한계, 금도가 있는 것이다. 홍 전 지사가 점쟁이나. 그렇게 점치면 우리 당원들에게 따귀박에 안 맞아요”라며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보수 2野 당권레이스 가열

한국당 홍준표 독주체제...바른정당 순위 경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당권 레이스가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후보로 나선 홍준표 전 경남지사, 원유철·신상진 의원 등 3파전 구도다. 홍 전 지사가 대선후보 프리미엄을 업고 초반 분위기를 제압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홍 전 지사는 당내 의석의 69%(107명 중 74명)를 차지하는 초·재선 그룹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중운등을 일컫는 새판짜기를 시도하고 있는 초·재선 그룹은 홍 전 지사의 ‘강한 리더십’에 희망을 거는 모습이다.

비홍(비홍준표)세력도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들은 홍 전 지사의 극우적 이념대결 구도 조성과 거친 언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초·재선 그룹의 일부에서도 홍 전 지사가 당 대표가 될 경우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 외연을 확대하기보다는 사분오열되는 계기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결국, 홍 전 지사의 독주 체제가 계속

될지, 비홍세력의 규합이 이뤄질지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계(친박근혜)가 영향력을 행사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바른정당 경선은 애초 5파전에서 4파전으로 압축됐다. 지상욱 의원이 전날 사퇴하면서 이해훈·하태경·정운천·김영우 의원이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겨루는 중이다. 일단 4명 후보 모두 지도부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전대에서 1명의 당대표,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1위가 되는지와 또 나머지 순위 경쟁이 눈길을 끄는 상황이다.

하지만, 긴장감이 떨어진 탓에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한껏 달아오른 경쟁 열기가 다소 꺾일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에서 후보들 간 더 치열한 정책대결과 자질경쟁을 펼치며 시선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오는 26일,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3일 당대표가 결정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인사검증 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

국정위 “청문회 개선안 등 내달 5일까지 제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21일 “새 인사검증 기준과 청문회 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5일까지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사청문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국회의 인사청문 규정이나 법을 고쳐서 개선안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도덕성 검증에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인사배제 5대 원칙’과 관련해서도 “병역 회피, 부동산 투기, 탈세에 대해서는 엄격히 봐야 하지만,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위장전입의 경우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5년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논문표절 역시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등 국가에서는 관대한 면이 있었다. 2008년 이전과 이후를 구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고의성이나 불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처럼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해빙무드...국회 정상화 합의

정부조직법·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추경엔 입장차

김현미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가 ‘강경화 후폭풍’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진행이 재개되며 정부조직법 심의도 진행됐다.

하지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은 20일과 21일 연쇄 접촉을 갖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중으로 합의문 작성을 마치고 한·국·국·국민의당·바른정당까지 4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서명할 계획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곧 국회 인사청문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는 합의문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여야의 접촉에서 야당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인사검증 관련 국회 운영위 개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증인체택 협조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합의문에 7월 임시 국회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서는 시기와 수위 등을 놓고 청와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정부조직법 심의에도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며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등 국회 특위 연장 및 신설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추경안 심사에 대한 입장은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합의문에는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수준의 원칙적인 입장만 포함될 전망이다.

여야 간의 대치가 풀려가면서 국도교통위원회는 이날 김현미 국도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 채택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했으며 보수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회의에 불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송영길 “문대통령 9월 러 동방경제포럼 참석”

靑 “확정된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동방경제포럼(EERF)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했던 송 의원은 이날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EERF에 문 대통령이 가실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가는 것으로 공강대가 모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총 매입금액 : 11억원

▶1인 2,000만원 이상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